

[별첨 1]

『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(案) 주요 내용』

- 2019년 5월 29일, 제47차 당무위원회의 의결 -

1 선거권 및 피선거권

○ 선거권

- 국민 : 선거일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
- 권리당원 :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 규정상의 권리를 취득한 당원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

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

제5조(선거권)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.

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<제21대 총선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지정(案)>

- 권리행사 시행일 : 2020년 2월 1일
-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9년 2월 1일 ~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 6회 납부한자
- 당비체납처리금지 기간 : 2019년 10월 1일 이후(☞ 권리행사기준 시점 4개월 전)

○ 피선거권

- 당규 제10호 제27조의 1항의 권리당원 :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
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

제27조(자격)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,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
③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이 된 자는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2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정비

① 병역기피·음주운전·세금탈루·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 신설

- 자구수정 : 당규 제10호제6조 4호, 5호 중복 조문 통합
- 신·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당규 제10호제6조(부적격 심사기준)</p> <p>4. 뇌물, 알선수재, 공금횡령, 정치자금 범위반, 성범죄, <u>개인비리 등</u>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</p> <p>5. 뇌물, 알선수재, 공금횡령, 정치자금 범위반, 성범죄, <u>개인비리 등</u>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<u>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</u>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</p>	<p>4. (4~5항 통합) 뇌물, 알선수재, 공금횡령, 정치자금범위반,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<u>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</u></p> <p>5. (신설) <u>병역기피·음주운전·세금탈루·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

②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(※세부 내용 붙임 참조)

<예외없이 부적격>

- 살인, 치사, 강도, 방화, 약취유인, 마약류 등 강력범
- 뺑소니 운전(특가법 적용 ‘도주운전자’)
-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

<벌금 이상 유죄판결>

- 성폭속 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‘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’보다 강화된 ‘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’ 시 부적격 처리

<음주운전 관련 기준 강화>

- 음주운전·무면허 운전 관련 △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,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
- 윤창호법(특가법, 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)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

<기타>

- 부적격 심사 기준 규칙에서 강력범에 포함된 ‘절도’를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이동
- 병역기피는 본인의 병역법 위반
- 이 외에 기준은 2018지선 부적격 검증 규칙 준용하되,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

☞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(당규제10호 제6조제9항)

③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(안)

- 심사기준 : 정체성, 기여도, 의정활동 능력, 도덕성,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
- 심사방법 : 서류심사, 면접심사, 여론조사(공천적합도조사)
- 심사 배점기준

정체성	기여도	의정활동능력	도덕성	당선가능성 (적합도 조사)	면접
15	10	10	15	40	10

☞ 심사기준과 방법, 배점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및 7대 지선 시 방법과 동일

4 공천 심사 가·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(안)

① 공천심사 가산 기준 정비

- 정치신인 가산 규정 신설 : 10% 이상 20% 이하 범위에서 가산
-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감산 10%에서 25% 강화
-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%에 대해 감산 10%에서 20%로 강화
- 여성·청년·노인·장애인·다문화이주민·사무직당직자·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산 상향
(현행) 10%이상 20% 이하 → (개정안) 10%이상 25% 이하

② 경선 감산 기준 정비

-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감산 10%에서 25% 강화
-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%에 대해 감산 10%에서 20%로 강화
- 이에 따른 감산 경중을 고려한 경선불복·탈당·제명 해당자 감산 강화 조정, 당원 자격정지 징계경력자 감산 완화

공천심사		대상	경선	
개정안	현행		현행	개정(안)
10%~20%	없음	정치신인	10%	10%~20%
10%~25%	10%~20%	여성·청년·노인·장애인·다문화 이주민·사무직당직자·보좌진 등	0%~25%	0%~25%
-25%	-10%	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	-10%	-25%
-20%	-10%	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하위 20%	-10%	-20%
-10%	-10%	경선 불복 경력자	-20%	-25%
-10%	-10%	탈당 경력자	-20%	-25%
-10%이하	-10%이하	징계경력자	제명	-25%
			당원자격정지	-15%

※ 공천 심사 및 경선 가·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(案)

공천심사 규정	항목	경선 규정	비고
10% 이상 ~ 25% 이하	여성	25%	
		10%	전·현직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 인 여성후보자
		0%	해당 선거구에 신청한 공직과 동일 공직 수행 후보자
	중증장애인	25%	장애인등록증 제출(중증)
		10%	전·현직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 인 장애인후보자
		0%	해당 선거구에 신청한 공직과 동일 공직 수행 후보자
	노인		만 65세 이상
	청년 (선거일 기준)	25%	만 29세 이하
		20%	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
		15%	만 36세 이상부터 만 42세 이하
		10%	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
		10%	전·현직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 인 청년후보자
		0%	해당 선거구에 신청한 공직과 동일 공직 수행 후보자
	다문화이주민		신청자 본인일 경우, 北이탈주민 포함
	사무직 당직자		전·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및 전·현직 시·도당법정 유급사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. 다만 심사일로부터 퇴직 시한이 4년 이내인 자
	보좌진		8년 이상 당적 유지와 국회등록보좌진으로서 8년 이상 국회근무경력 가진 자
	공로자		1급 포상자
10%	교육연수 이수자		· 적용 범위 : 중앙당 대표 및 교육연수원장/전국위원 장, 시도당 위원장 및 교육연수위원장이 교육연수를 주관하고 발급한 수료증(이수증)을 증빙할 때 가산함 · 적용 기간 : 제6회 동시지방선거일 이후(14.6.4)
10%~20% (신설)	정치신인	10%→10~20%	<가산점 제외 대상> 1. 선관위 후보등록을 한 자(당적 불문) (비례후보자 등록 후 미당선자 제외) 2.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(당적불문) 3. 지역위원장
-10%→-25%	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	-10%→-25%	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이상을 마치지 않고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

-10% 이하	징계 경력자	-20% → <u>-15%</u>	당원자격정지 : 징계종료일로부터 3년	☞ 가산 대상 제외 탈당자·경선불복경력 자·중징계자 (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이상 의 징계를 받은 자)는 가산 대상 적용제외
		-20% → <u>-25%</u>	제명 :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	
-10%	탈당 경력자	-20% → <u>-25%</u>	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자 (직업상 이유,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)	
-10%	경선 불복 경력자	-20% → <u>-25%</u>	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(△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(현) △ 5년 이후 경선 감산 적용, 각급 선거 때마다 계속 적용)	
-10% → <u>-20%</u>	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%	-10% → <u>-20%</u>		

- 중복의 경우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,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

⑤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방법(안)

① 단수후보자 선정기준 강화

○ 단수후보자 선정방법(案)

- 심사총점 :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가 30점 이상일 때
- 공천적합도(여론조사) :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 20%p 이상일 때

②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함

③ 경선후보자 선정방법(案)

- 서류·면접 심사결과(공천적합도평가 포함)를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,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
6 경선방법

- 경선방법 : 국민참여경선(권리당원+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)
- 경선후보자 수
 - 2~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,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
 - 경선후보자 수 등을 고려 필요시 1차 경선 실시 후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 대상으로 2차 경선 실시 가능
 -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 가능
- 투표·조사결과 반영비(안)
 - 권리당원선거인단 50%, 안심번호선거인단 50%
 - 투표방법(안)

권리당원	모바일ARS 투표 · Out-Bound 2일 5회
	유선전화 ARS투표 (휴대번호가 없는 선거인) · In-Bound 1일
안심번호선거인	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 2일 5회

- 선거인단 구성(안)

권리당원	해당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 무효값 처리 기준 : 선거인단 구성수 <u>300인 미만</u>
안심번호선거인	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 무효값 처리 기준 : <u>300인 미만</u> (20대 총선 기준 동일)

7 제21대 총선 공천제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권리당원 전원 인터넷투표 실시

- 당 현대화특위에서 개발한 인터넷투표 시스템을 통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실시 위한 근거 규정 마련
- (현행 당규 제38조1항) ARS투표 → (개정안) ARS투표, 인터넷투표

□ 붙임. 부적격 기준 구체적 적용 규칙

구분	내용	부적격 기준
사고위원회 판정	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	판정일로부터 5년
징계 경력보유자	당 윤리위로부터 제명된 자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 자	제명: 징계 확정 기준 5년 당원자격정지: 징계 종료 기준 3년
경선불복 경력보유자	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 을 위한 선거에서 그 결과에 불복 하는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자	경선불복 행위 5년 이내 ※ 소명기회를 준 후, 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강력범	살인, (고의범죄가 결합된)치사, 강도, 방화, 약취유인, 마약류 등	예외 없이 부적격 ※ 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, 본인 소명 후 검증위에서 판단
부정부패	뇌물, 알선수재, 공금횡령, 조세관련 법, 변호사법 등 위반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, 고액·상습 체 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선거관련	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※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
파렴치 및 민생범죄	사기, 공갈, 폭행, 절도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
	횡령, 배임	
	음주운전(측정거부 포함)	선거일부터 15년 이내 총 3회,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적격 운창호법 시행이후(19.12.18)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경우 원천배제
	무면허 운전	
	뺑소니 운전 (특가법 적용 ‘도주운전자’)	예외 없이 부적격
	부정수표단속법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※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
	사·공문서 위조 등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※병역기피는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
	무고	
	입찰, 공사수주	
	도박	
	명예훼손, 허위사실유포	
	병역기피	

<p>성폭력 범죄 등 ※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</p>	<p>강간죄, 강제추행죄, 강제유사성교 행위 등</p>	<p>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(기소유예 포함)</p>
	<p>통신매체 이용음란, 공중밀집장소에 서의 추행,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음행매개, 음화반포, 음화제조, 공연 음란,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 작, 배포 등</p>	
<p>성매매 범죄</p>	<p>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, 권유, 유인,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, 성매매에 제공되 는 자금, 토지, 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, 유인, 인신매매 등</p>	
<p>성풍속범죄 ※형법 제242조~245조</p>	<p>음행매개 음화반포(음화판매, 임대, 전시, 상 영 등), 음화제조, 소지, 유입, 유출 공연음란죄 등</p>	<p>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</p>
<p>가정폭력</p>	<p>「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력</p>	
<p>아동학대</p>	<p>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 (제17조 금지행위)</p>	
<p>성희롱</p>	<p>「여성발전기본법」,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성희롱</p>	<p>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(민사상 손해배상 포함)</p>